

7월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하반기 돌입

원내대표는 누가 되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원 구성은 같은 당이 아닌 다른 당의 의원 5인 이상이 원 구성을 할 수 있다. 현재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7명, 국민의힘 소속 1명, 정의당 소속 1명, 진보당 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만이 원내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원내대표는 당과 당 사이의 문제를 조율하고, 당과 의원 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 원만한 원 구성 합의 등 정당의 입장을 대변해서 의회 운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장연국 의원 단독 출마 예정돼



장연국 의원

일을 맡게 된다. 이번 12대 도의회 하반기 원내대표는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장연국 의원은 광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전북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한 학구파 의원으로 학사장교 출신답게 국가관이 확립된 바른 인성을 가진 의원으

로 정평이 높다. 전북도청 정책지원팀에서 정책개발 업무를 한 이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 정당 활동을 시작해 연청 지구회장,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 읍지로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역임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대변인으로 활발한 정당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본일, 장애인, 소상공인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사)민족통일 전라북도협의회 사무처장과 (사)전북

지체장애인협회 대의협력위원장, (사)전북 청년경제인연합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기에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더욱 돋보인다.

도민들은 의회 운영과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의회 운영과 더불어 집행부를 견제할 것이라기보다 잘한 것은 과감히 칭찬해주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지적해 집행부에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원내대표가 당과 의원 간의 가교역할을 잘하고 당의 입장만 반영하는 의정활동이 아닌 도민을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한복소리를 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마을기업 도약 고도화 지원사업 공모

전북특별자치도가 마을기업의 도약을 위해 고도화 지원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2024년 마을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신청을 6월 5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접수받는다.

'마을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도내 재지정(2회차) 이상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홍보·마케팅, 시설·장비 구축, 제품개선 등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전북자치도 마을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은 총 5억원을 투입, 3개 분야로 나눠 참여 접수받는다.

마케팅, 제품개발 등의 경쟁력 강화 분야는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위생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자금으로 HACCP 인증 지원과 시설·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인프라 지원사업에는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된다.

마을기업이 소재한 시군의 현지조사·적격검토, 전북자치도의 현장실사를 거쳐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등, 도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북자치도 우수마을기업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마을기업 수요에 맞춘 다각화된 지원을 위해 1개 분야에 한정되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던 전년도와 달리 총사업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속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15% 이상인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가점도 부여받게 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2024 쌀페스타 농업정책대상 수상 영예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쌀 페스타'에서 대한민국 쌀 브랜드대상 농업정책대상(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자치도는 고품질 쌀 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전북 쌀 품질 고도화 시설개선사업, 쌀 경쟁력 제고사업, 전북 쌀 홍보지원 등을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2024 대한민국 쌀 페스타 행사는 국내 쌀 소비촉진을 도모하고자 시상식, 쌀·홍보관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전북자치도에서는 도내 대표 브랜드 쌀 '실리향'을 비롯해 △군산 회현농협 '옥토진미' △군산 옥구농협의 '뫼맛이 신동진' △김제조공농협의 '지평선 쌀' △김제 금민농협의 '황금마루' △부안농협의 '해풍 신동진'이 쌀 브랜드홍보관에 참가해 대표 브랜드 쌀을 선보였다. /이만호 기자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협약 30일 충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사진 왼쪽)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헌재, 문재인 정부 종부세 '합헌' 결정

"과세기준 자의적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했던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0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헌법소원심판에서 종부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2020년 종부세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들은 관할 세무서장의 종부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7항,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종부세법 제7~9조는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10조와 12~13조는 각각 세부담의 상한과 과세표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다. 헌재는 이날 종부세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기각 결정했다.

먼저 헌재는 종부세법 제7조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의해 결정·공시되는 '공시가격' 부분에 대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종부세법 제8조1항, 제13조1항, 2항 중 각 '공정시장가격비율' 부분과 제9조4항 중 '주택 수 계산' 부분의 포괄 위임금지원칙 위반인지에 대해서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 하위법령에 정해진 공정시장가격비율의 내용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종부세법 제9조1항 각호 중 '조정대상지역' 부분도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주택 시장의 안정 및 부동산 가격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라며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종부세법의 입법 목적에 대해서도 "일정 가격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이라며 "종부세법이 지방세인 재산세에 비해 높은 세율의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종부세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 종부세와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 보면 종부세가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에서 이중과세에 해당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들의 청구

를 기각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종부세율·세부담의 상한 등을 차등화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주택별 종부세의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의 인상,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별 종부세의 세율 인상 등도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익)는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제2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순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행조사(위원장 최용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과보고서에는 관내 19개 사업장과 읍·면 소규모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보완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처리결과를 집행부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용수 위원장은 결과보고에 대해 "군정 주요사업장에서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본 결과 미흡한 곳은 보완을 지시했다"면서, "성실시공 및 자체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총평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22대 국회 개원... 내달 5일 의장단 선출

여야 원 구성 이견에 정식 개원식은 미정

민주 "국회법 따라 내달 7일까지 마무리"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했다. 이번 국회는 192석의 법야권과 개헌지지 선을 지켜낸 108석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구도로 의원 300명이 4년간 입법활동을 이어간다.

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열린 첫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 후 열린다. 아직 여야 간 국회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일정은 미정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한복소리를 냈다. /이만호 기자

위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협상에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여야 대치 정국은 이번 국회에서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외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개혁 1호 단론편안으로 채택해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법 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이를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라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호하고 나섰다.

22대 국회의 의석은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이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해 원의 정당이 됐다. /뉴스

농산물 가격 안정·농가 경영위험 대응

민주 윤준병 의원,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 등 대표발의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심화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재선)이 22대 국회 개원 후 자신의 제1호 법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법안은 지난 총선에서 주민들과 한 약속을 실천하고, 쌀과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 불안정으로 경영 위기에 빠져 있는 농민 및 농가들에게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윤준병 의원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농산물 가격 폭등 시에는 정부가 개입하면서도,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원가 보장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농산물

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쌀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생산·수요·재고 등 관련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주민들에게 약속드린 사항을 실천함과 동시에,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농가 경영위험 방지 입법을 제22대 국회에서 해결하기 위해 오늘 제1호 법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라며 "쌀을 비롯해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날로 심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법안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농심(農心)을 지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지 말고, 농민들의 소득 보장·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 정착에 노력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22대 국회 1호 법안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민주 서미화 의원 "절박한 심정으로 발의"... 3박 4일 밤샘 대기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박 4일간 밤샘 대기한 끝에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과를 직접 찾아 22대 국회 1호 법안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서 의원은 보좌진은 해당 법안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3박 4일간 국회 의원과 앞에서 지켰다. 서 의원은 시작장애인으로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당선됐다.

서 의원은 법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간절하고도 절박한 이동권을 정치적 과제인데도 지금까지 비장애 시민과 장애인 시민을 갈라치고 혐오 정치를 양산하는 상황이었다"며 "장애에 간절한 요구와 정치적 과제를 하루 속히 해결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며칠 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



가하며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이동권을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개정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장애인도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제출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에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의 구체화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체계화 및 내용 구체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달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뉴스